

다산포럼



김순국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화회 회장

세조 정변에 맞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방외인(方外人)으로 평생을 유랑했던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다섯 살 어린 나이에도 한시를 능히 지을 수 있었다 한다. 그런데 신동이라는 소문이 세조의 귀에 까지 들어가 왕이 어린 김시습을 직접 보고자 한 일이 있었다. 야사(野史)에 의하면 세종은 도승지 박이창을 시켜 김시습의 글재주를 시험했다 한다. 박이창이 먼저 "동자의 학문은 흰 학이 푸른 하늘가에서 춤추는 것 같도다.(童子之學白鶴舞靑空之末)"하자, 김시습은 서슴지 않고 "임금님의 덕은 누런 용이 푸른 바다 가운데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聖主之德黃龍騰碧海之中)"고 대구(對句)를 달았다. 감탄한 세종은 김시습에게 나이가 들어 학문이 이루어지면 불러다 크게 쓰겠노라고 약속했다. 이 일로 김시습은 당시 나이에 따라 '오세(五歲)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졌다. 설악산 오세암(五歲庵)도 자신의 별칭을 따서 지은 것이라 한다. 하지만 김시습은 더러은 세상을 경멸하는 '오세(傲世)로 불리길 바랐다.

돈급없이 왜 김시습 얘기가 나왔는지, 요즘 문제가 되는 '오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다. 김시습은 나면서 8개월부터 글을 알았을 정도로 천재성을 지녔으며 '시습(時習)'이란 이름처럼 '때가 되면 스스

‘오세’ (五歲) 초등생

로 글을 익혔다" 한다. 요즘 아이들도 김시습처럼 그렇게 스스로 깨우치기에 입학 연령을 낮추려고 한 걸까?

오세 초등 입학 정책의 사연은 이렇다. 대통령 업무 보고 때에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기에 맞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육세에서 만 오세로 낮추면 좋겠다는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한다. 그 정책의 적절성 여부는 검토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초등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었을 때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학부모나 교사 등 교육 주체들과 국민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정책을 덜컥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나 국정 수행 과제에도 없는 내용이였다. 그렇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졸속(拙速)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라!

교육의 문제는 온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핫 이슈다. 가족 중에 자식이나 손자나 동생 등 누구라도 교육과 관계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항상 교육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환심을 사하고자 했다. 입시 정책을 이리저리 바꿨던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그런데 학제(學制)의 개편은 입시보다 더 큰 문제다. 교육의 근간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지 않던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대통령실은 여론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냥 물러서지 않고 교육부에 TF팀을 꾸려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의 반대 여론은 무려 98%에 이르고, OECD 국가 중 초등 입학 연령을 만 오세로 하는 나라는 10%도 안 된다.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셈인데도

검토하라는 여지를 남기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야기를 좀 바꿔 보자. 삶의 질이 높다는 선진국 노르웨이에 동생네가 살고 있다. 간호사인 제수씨가 오래 전 의료 이민으로 가서 터를 잡고 아이와 남편을 데려간 것이다. 조카는 다섯 살에 건너갔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한국어에서처럼 경쟁심이 발동해서 그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복습과 예습을 해갔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를 호출해서는 당선들이 혹시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시킨 거냐며 으름장을 놓더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고 했더니, 만약 그러면 '아동 학대'라며 아이들에게 절대 공부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아이들은 잘 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며. 어릴 때부터 영어 회화에 수학 과외에 선행학습으로 혹사당하는 한국의 어린이들에 비하면 정말 천국 같은 얘기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처럼 만 오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좋은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한 경쟁 체제로 들어서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교육에서 중요한 '창의성'은 사라지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반복 학습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어찌 국가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시도보다 어떻게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일이다.

1957년 한국동화작가협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은 '오세(五歲)가 아니라 세상과 여론을 업신여기는 '오세(傲世)의 태도가 아닌가?

청춘 특특



김유나
동신대 방사선학과 1년

"선화 공주님은 / 남 몰래 시귀어 / 맞둥(響童) 도련님을 / 밤에 몰래 안고 간다"(善化公主主孀 / 他聲良童古 / 響童房乙 / 夜矣卯乙抱遣去如)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인 '서동요'는 민요가 동요로 정착한 유일한 노래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무왕이 만든, 최초의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우리 역사만큼이나 그 유래가 깊다고 볼 수 있다.

SNS가 발달하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며, 가짜 뉴스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요즘, '어쩌면 우리 역사는 가짜 뉴스에 대한 투쟁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가짜 뉴스(Fake News)란 무엇일까? 가짜 뉴스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잘못된 정보, 조작된 정보, 악의적 정보로 나눌 수 있다.

가짜 뉴스에 대처하는 방법

잘못된 정보의 경우 현실적 악의가 없는 단순 실수로 오보 정정이 가능하다. 조작된 정보는 조작된 정보를 개인이나 집단, 조직, 특정 국가에 피해를 주는 목적으로 유포하기에 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악의적 정보는 내용은 사실이지만, 누군가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 악의를 가지고 유포하는 정보다.

최근 가짜 뉴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 사범은 모두 732명으로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허위 사실 공표 등 여론 조작 사범이 431명으로 약 59%를 차지했다. 개인 또는 조직이 목적을 가지고 조작하거나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가짜 뉴스는 그 영향력도 문제다.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 전후로 페이스북에서 '가짜 뉴스'의 인기도가 '진짜 뉴스'보다 여섯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인기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유와 연결된다. SNS 시대에 가짜 뉴스가 곧 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등 많은 SNS와 인터넷 플랫폼은 높은 조회 수가 나올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구조다. 자극적이고 인기가 높을수록 돈이 되

는데, 갈등을 목적으로 한 가짜 뉴스는 최고의 아이템 중 하나다. 실제 지난 우리나라 대선 기간 보수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은 '방송 10시간 만에 17억 원을 돌파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렇다면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가짜 뉴스가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가짜 뉴스라면, 우리는 그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오염되지 않은 사실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령 일제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인 사실마저도 일본을 대변하는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유포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역사를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또한 돈을 벌기 위해 남의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등을 유발하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토론과 대화,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과 유튜브, 그 콘텐츠에 광고하는 기업,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인을 감시하고 체포질한다면?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고



이수미
국립광주박물관장

여름방학을 맞아 박물관을 찾아오는 가족들과 어린 이들로 시끌벅적하다. 이제 박물관은 놀이와 휴식의 장소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박물관의 목적을 낮추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 박물관인들의 과제이다. 어려운 설명문을 쉽게 쓰거나 관람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 내용을 구성하고 계기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아마도 이러한 박물관의 변신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박물관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박물관은 인간이 남긴 물건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연구·전시하며 그 의미를 전수하는 곳이다. 국립광주박물관의 경우,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임무가 있으며 매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6000점 이상 등록하여 보관처를 마련한다. 이러한 활동은 전시와 교육, 행사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기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지만 박물관의 기본적인 활동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박물관

한국미술사 전공 교수의 부재

의 기본 업무인 유물 관리·전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학예 연구직이라 하며 자연과학적 배경의 보존 처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고학·미술사·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국립광주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 그것은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서 근현대 미술이 아닌 전통시대의 한국미술사를 가르치는 전공 교수가 없다는 것. 미술사라는 학문은 인간이 남긴 물건 중에서도 특별한 가치가 부여된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형태·변화·연원·영향·교류 등을 다각도로 탐구하여 중국에는 사회적·사상적·미적·종교적 의미를 해석해 내는 것을 지향한다.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시대의 한국미술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서화사·도자사·조각사·공예사를 가리키며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분야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사학회인 한국미술사학회의 정회원 264명 중에 현재 광주·전남의 대학에 적을 둔 정회원이 한 명도 없다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물론 우리 박물관을 비롯한 지역의 연구소, 문화기관 등에 근무하는 한국미술사 전공자들이 소수 있지만, 대학에서 한국미술사를 가르치는 전공 교수가 없다는 것은 심각하다. 이는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전공자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자·서화·불교미술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관련 학술 정보들이 많이 공개되고 대중화 되어 온라인 검색만으로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관해서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전문 연구자의 배출이 활발해야 새로운 원천 자료를 발굴하고 그것의 정체성을 파헤칠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구가 축적될 수 있다.

문화재의 연구와 활용도 지역 간 경쟁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러한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활동이 없으면 우리 지역 문화 사업도 일회성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학문 후속 세대의 배출과 체계적인 연구 집단의 유무는 우리 지역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기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며 지역 문화의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연구와 후속 세대 양성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대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문화유산 연구와 활용의 선순환을 이룰 한국미술사 전공 교수가 예방이라 자부하는 광주·전남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간에 품격을 더하는 것은 문화이고, 그 문화의 정체성은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에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지역의 특별함은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도에 펼쳐져 있는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의 보고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후속 세대를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때 그 변주와 활용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믿는다.

社說

3고에 한계 내몰리는 중소기업 “추석이 두렵다”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이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자금 수요가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급증한 대출과 높아진 어음부도율 및 연체율로 자칫 최악의 명절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광주신용보현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들을 대신해 지급한 매출채권보험 보험금은 25억 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2억 3400만 원)보다 12.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건수도 48건으로 전년보다 20.0% 늘었다. 여기에 광주 지역 어음부도율은 0.28%(6월 기준)로, 전국 평균의 세 배를 웃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빛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출 잔액도 1년 새 8조 원이나 불어났다. 올해 5월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은 광주 35조 12억 원, 전남 28조 36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55조 3226억 원보다 14.5%(8조 441억 원) 늘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에 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빛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 7%대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3조 6000억 원 규모의 '추석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들 자금이 실제 현장에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당장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명절 자금 수요가 몰리는데 정부의 정책 자금을 기다리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시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제고통지수도 역대 최고...민생 회복 총력을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물가 상승과 실업 등으로 인해 지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시울) 국회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각각 9.5였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코인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지표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 실업률은 2.9%였고, 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3%, 실업률은 2.2%였다.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였다. 광주도 2008년 8월(9.8)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전국 평균(9.2)보다 높았다. 문제는 정부가 고물가에 제대

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제고통지수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 4월 7.8이었던 전국 경제고통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5월 8.4에서 6월에는 9.0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중부세·소득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정책 방향은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그 돈이 소비·투자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서울 조정에 따른 효과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역대 최고의 경제고통지수가 말해 주듯 지금 서민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으로 먹고살기가 힘들어진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無等鼓

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지만 마주한 현실은 초라함을 넘어 국정 운영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50% 초반대 지지율로 출발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등 순항하는 듯 했다. 하지만 순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취임 50일이 넘어서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곧이어인사 실패 등 각종 약재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말 30%대가 무너지고 이달에는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정 운영 해법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레임덕'이 아닌 '취임' 국정 운영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권의 상황은 심각하다. 집권 여당은 대선 승리와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가 하면 전 대표는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을 직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각종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심의 냉랭한 눈길은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집권 모토는 대통령실 인사에서부터 깨졌고 민생 경제를 살릴 해법을 좀처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 방역' 약속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들끓는 민심에 기쁨을 붓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민심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하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은 결국 국민적 공감이다. 그런 측면에서 17일 실시되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향후 여론의 향배를 가를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진실한 태도로 그간의 오류를 인정하고 인적 쇄신 등 과감한 해법을 제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이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